

선거의 독립변수로서의 종교적 요인*

최 현 증**

- I. 들어가는 말
- II. 종교와 정치적 지향성
 - 1. 선행 연구 및 외국의 사례들
 - 2. 헤럴드 경제 자료/KGSS 분석
- III. 선거 쟁점으로서의 종교 관련 이슈들
- IV.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세속화 이론 이후 종교의 공적 영역에서의 역할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정치적 영역은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영역이기도 하다. 이는 특히, 80년대 이후 미국에서 보수적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정치참여가 활발해지고, 이를 모방한(?) 한국 사회에서의 기독교 우파의 정치 참여가 두드러지면서 더욱 중요한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 사회의 종교와 정치적 지향성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헤럴드 경제의 조사 결과와 2008년 이후 한국종합사회조사(이하 KGSS: Korea General Social Survey)의 결과를 토대로 종교에 따른 정당 및 대통령 후보자 지지를 통해 각 종교 형태가 정치적 지향성에 차이를 가져 오는지 살펴보려

* 본 논문은 한국종교사회학회와 한국사회역사학회가 2012년 11월 16일(장소: 이화여자대학교)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2012년도 정부제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다(NRF-2012-330-2012S1A3A203360 8).

** 서울신대 기독교신학연구소 선임연구원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종교 관련(편향) 이슈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이와 같은 이슈들이 현재의 한국 정치 상황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한국에서의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시론의 성격을 지니며,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과정과 영향 요인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고찰은 이후 별도의 연구를 통하여 시도될 것이다.

II. 종교와 정치적 지향성

먼저 종교와 정치에 관련된 선행 연구 및 외국의 사례들을 검토하고, 이어서 2012 대선을 앞두고 조사된 자료 중 종교 변수를 포함한 헤럴드 경제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교별 정당/대선 후보지지 성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본 논문은 한국 상황에서의 선거에 있어서의 종교적 요인의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기존의 KGSS 자료와 비교하여, 다른 변수로부터 독립된 종교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한다.

1. 선행 연구 및 외국의 사례들

세속화 이론의 확산 이후, 종교의 사적인 영역으로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이 종교를 ‘사사화(privatization)’하는 추세에 대하여, 여전히 공적 영역에서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확인한 이가 바로 카사노바(J. Casanova)이다.¹⁾ 그는 이러한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의 역할을 국교(state), 정치적 활동, 시민 사회에서의 역할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현대 사회의 중요 특징 중 하나를 기능적 분화라고 한다면, 국교는 더 이상 현대에 있어서는 중요한 정치와 종교의 형태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아직도 많은 국가의 주요 정당에 종교의 이름을 내건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 종교적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카사노바는 종교가 현대 사회 속에서 공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 시민사회를 얘기한다. 카사노바가 얘기한 이러한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논문의 말미에서 현재의 한국 사회의 상황과 관련해서 다시 좀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1) Jose Casanova, *Public religions in the modern wor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세속화를 그 유형에 따라 구분한 대표적 학자인 마틴(D. Martin)은 서구 사회, 특히 유럽의 종교와 정치와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그 대표적 형태로 정치와 종교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가톨릭/라틴 모델과, 양자가 어느 정도 분리된 형태를 띤 개신교 모델을 구분한다.²⁾ 특히 후자의 형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정치와 종교가 관련성을 갖고 있는 북유럽 모델(개신교 모형 A)이나, 영국(개신교 모형 B1)과는 달리 미국(개신교 모형 B2)은 더욱 분명하게 분리된 형태를 지향한다는 것이 마틴의 분석이다. 하지만, 현대에 있어서는 과거의 이와 같은 분리된 전통에도 불구하고, 라틴 국가에 있어서도 국교의 형태로 정치와 종교의 관계가 유지되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단지 일부 국가에서 기독교 이름을 명기한 형태의 정당 활동을 통해서만 어느 정도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원규는 홀트(T. F. Hoult)를 인용하면서 종교의 조직 형태나 사회 내에 자리 잡은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수적 정치성향을 띠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³⁾ 소위 기성종교는 사회의 지배적인 제도와 가치를 옹호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안정과 통합에 기여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정치권력으로부터 종교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무형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이러한 관계는 종교가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갖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의 보수적 정치 성향은 독일의 ‘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CDU, 기독교민주당)/Christlich-Soziale Union (CSU, 기독교사회당)’ 연합이나, 지금은 사라진 과거 이탈리아의 Democrazia Cristiana (DC, 기독교민주당)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경우 정당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사회민주주의 노선에 동의하는 특징을 지니지만,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정당들은 보다 보수적인 자리에 위치한다.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에도 브라질의 예를 들면, 기독교 정당임에도 정당명에 “Partido Social Cristão(PSC, 기독교사회당)”, “Partido Trabalhista Cristão(PTC, 기독교노동당)”, “Partido Social Democrata Cristão(PSDC, 기독교사회민주당)” 등과 같이 ‘사회(social)’, ‘노동(trabalhista)’ 등을 병기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도 혹은 보수적 노선을 취하고 있다.⁵⁾ 이와 같은 사실은 이슬람 국가의 경우도 유사하다. 이슬람 국가의 경

2) David Martin, *Tongues of fire :the explosion of Protestantism in Latin America*, (Oxford: Blackwell Publishers, 1990), pp. 9-26.

3) 이원규, 『종교사회학의 이해』 개정판, (과주: 나남, 2006), pp. 466-68.

4) Martin, 위의 책, p. 14.

5) 물론 진보적인 가톨릭 사제들, 평신도 운동가들, 해방신학자들은 좌파 민주연합에 별도로 참

우 서구적인 보수/진보 혹은 좌우의 범주에 따라 일괄적으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종교와 관련된 정당은 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이슬람 혁명을 일으킨 이란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이집트와 같은 경우에도 최대 정당인 Hizb Al-Hurriya Wal-'Adala(자유 정의당)은 무슬림 형제단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보수적 노선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위의 국가들과는 조금 사정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일단 마틴의 분류처럼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개신교 모델의 전통에서 있고, 나아가 그것이 가장 강화된 경우이다. 또한 유럽의 경우와는 달리 종교를 표방한 정당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가 사회 전체적으로나, 공적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잃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치와 종교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교단의 신학적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야기 된다. 소위 주류 기독교(mainline church)의 경우는 보다 진보적 입장에 선 민주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반하여 보수적 기독교, 소위 복음주의적(evangelical) 기독교나, 근본주의적 기독교(fundamentalism)는 보다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공화당의 중요한 지지세력이 되고 있다. 더욱이 1980년대 이후 등장한 '도덕적 다수'(moral majority)를 비롯한 근본주의적 기독교의 정치 참여는 미국 사회에 있어서 정치와 종교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미국 사회의 주요 종교 중 카톨릭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일부에서는 케네디 대통령 시절을 제외한다면 미국의 카톨릭은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해 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⁶⁾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우리 나라는 위에 열거된 여러 나라와는 달리 명실 상부한 다종교 국가이다. 인구센서스 상의 비종교인의 비율도 46.7%에 이르고, 종교인 또한 불교 22.9%, 개신교 18.3%, 가톨릭 11.0%로 특정 종교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원규는 박용현의 1980년도 조사 자료 및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1987년도 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기독교(개신교, 가톨릭 포함)가 불교보다 비판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⁷⁾ 하지만, 여기에는 연령 및 지역 효과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장·노년층, 영남 지역에 가장 많은 신도를 지니고 있는 불교의 경우, 이것이 불교 자체의 종교적 영

여하고 있다.

6) Jeff Manza and Nathan Wright, "Religion and Political Behavior," in: Michele Dillon ed.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Relig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 305

7) 이원규, 위의 책, p. 477.

향이라기 보다는 신자들의 지역적, 연령적 특색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⁸⁾

유석춘과 서원석은 1987년의 13대 대선 자료를 분석하는 가운데, 종교별로 다른 선거 양태가 나타남에 주목하였다.⁹⁾ 이에 따르면, 불교 신자들은 노태우(40%), 김종필(32%), 김영삼(28%), 김대중(17%) 후보 순으로 지지집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개신교 신자들은 김대중(23%), 김영삼(20%), 김종필(17%), 노태우(11%) 순으로, 가톨릭 신자들은 김대중(11%), 김영삼(8%), 노태우(7%), 김종필(4%)의 순으로 지지를 표명하였다. 즉, 불교가 보다 보수적인 후보를 선택하는 성향이 있는데 반하여, 기독교 계통의 종교인들은 보다 진보적인 후보를 선택하는 성향을 띤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석춘과 서원석의 연구에서도 종교적 변수에 내재된 여타 변수의 영향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신대학교 학술원 신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는 개신교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약간 보수적인 경향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는데, 자신의 생각을 ‘매우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0.3%, ‘약간 보수적’이라고 한 사람이 60.5%로, ‘약간 진보적’(26.8%), 매우 진보적(2.3%)을 합한 진보적 성향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의 대표적 진보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장로회’에서조차 보수적인 성향(‘매우 보수적’ 7.0%, ‘약간 보수적’ 68.4%)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보수적인 교단인 ‘하나님의 성회’(‘매우 보수적’ 10.8%, ‘약간 보수적’ 55.4%)나 ‘고신’(‘매우 보수적’ 7.1%, ‘약간 보수적’ 58.8%)보다도 높은 비율로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¹⁰⁾

2. 헤럴드 경제 자료/KGSS 분석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종교는 정치 혹은 선거와 관련하여 어떤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가? 본 논문에서는 먼저, 앞에 언급한 바처럼 2012년 대선을 앞

8) 지역별, 연령별 종교의 특성에 관하여는 최현중, 『한국 종교인구변동에 관한 연구』 (부천: 서울신학대학교출판부, 2011) 참조.

9) 유석춘/서원석, “유동표에 대한 관별분석: ‘87년 대통령선거,” 『한국사회학』 23(1989), pp. 130-31.

10) 한신대학교 학술원 신학연구소, 『한국 기독교인의 정치·사회 의식 조사』 (과주: 한울, 2004), pp. 173-74.

두고 조사된 자료 중 종교 변수를 포함한 헤럴드 경제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교별 정당/대선 후보지지 성향을 분석하고, 이를 KGSS 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종교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헤럴드 경제 자료는 조사 시점이 대선을 7개월 여 남겨둔 5월이었고, 새누리당과 야권의 후보가 확정되기 이전 다자구도를 전제로 한 것이기에 대선 시점과는 많은 차이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인구사회학적 지표에 따른 기본적 성향을 파악하는 데는 여전히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여야의 정당 지지도(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와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그리고 야권 통합과정에서 사퇴하였지만, 중요 후보로서 대두되었던, 그리고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는 안철수의 3인과 관련된 자료만 분석에 포함하였다.¹¹⁾ 헤럴드 경제의 조사개요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2012 대선 관련 헤럴드 경제 조사 개요

1. 조사대상 :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남, 여
2. 표본수 : 1,000명
3.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에 의한 1대1 전화면접조사(Telephone interview) RDD방식
4. 조사기간 : 2012년 5월 10일 ~ 5월 11일
5.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pm 3.1\%$ point
6. 응답률 : 7.97% (12,541명 통화)
7. 표본추출방법 : 지역·성·연령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RDD방식)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통계를 보정 (2012년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인구사회학적 지표에 따른 정당 지지도 차이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 드러난 결과에 의하면 새누리당 지지율은 여성, 높은 연령층, 영남 지역, 보수적 성향층에서 높게, 반면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은 남성, 젊은 연령층, 호남 지역, 진

11) 헤럴드 경제 자료는 원자료를 확인하지 못하고, 공개된 자료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원자료 이용을 헤럴드 경제 측에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좀 더 심도 깊은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보적 성향측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예측과 특기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지역적으로 영남과 호남을 제외하면, 충청, 강원/제주에서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민주통합당 보다는 높지만, 전국적인 평균과 비슷하며, 수도권에서는 평균보다 약간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의 주요 관심사인 종교 변수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불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개신교에서도 평균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인다. 반면 가톨릭에서의 지지율은 평균과 비슷하며, 무종교인에서는 평균보다 낮은 지지율을 보인다. 이에 반하여,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은 불교에서 가장 낮고, 무종교층에서 가장 높으며, 개신교와 가톨릭에서는 평균에 근접한 지지율을 나타낸다. 유교와 기타종교는 사례수가 많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별 지지율 차이는 종교의 지역별, 연령별 분포의 차이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불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영남권과 장,노년층의 지지 효과가 불교의 새누리당 지지로 연결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 변수 자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별도

표 2. 정당 지지도(2012 헤럴드 경제 조사 자료)

구 분		사례수 (1,000)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없음	
			빈도	%	빈도	%	빈도	%
			397	39.7	286	28.6	204	20.4
성별	남성	(500)	184	36.8	149	29.8	114	22.8
	여성	(500)	213	42.6	137	27.4	90	18.0
연령별	20대	(184)	42	22.8	65	35.3	50	27.2
	30대	(205)	42	20.5	82	40.0	45	22.0
	40대	(220)	76	34.5	68	30.9	45	20.5
	50대	(187)	107	57.2	32	17.1	35	18.7
	60대 이상	(204)	130	63.7	39	19.1	29	14.2
권역별	서울	(202)	68	33.7	59	29.2	60	29.7
	경기/인천	(289)	102	35.3	86	29.8	63	21.8
	영남권	(262)	159	60.7	42	16.0	31	11.8
	호남권	(103)	10	9.7	58	56.3	24	23.3
	충청권	(102)	41	40.2	31	30.4	16	15.7
	강원/제주	(42)	17	40.5	10	23.8	10	23.8
성향별	진보적	(366)	78	21.3	158	43.2	73	19.9
	중도적	(329)	111	33.7	90	27.4	87	26.4
	보수적	(305)	208	68.2	38	12.5	44	14.4
종교별	가톨릭	(86)	34	39.5	23	26.7	19	22.1
	개신교	(251)	118	47.0	74	29.5	45	17.9
	불교	(211)	116	55.0	44	20.9	27	12.8
	없음	(432)	122	28.2	136	31.5	113	26.2

의 분석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후반부에서 KGSS의 분석을 통하여 이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것이다.

정당 지지도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주목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지정당 없음’의 분포이다. ‘지지정당 없음’의 분포는 정치적 성향을 제외하고는 새누리당보다 민주통합당의 지지 세력 분포와 유사하다. 즉, ‘지지정당 없음’은 남성, 젊은 연령층, 가톨릭과 무종교인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지지정당 없음’의 비율이 높고, 강원/제주와 호남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물론 강원/제주의 경우는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더 높은 지역이지만, 그 외 호남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 또한 상대적으로는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이 높은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지정당 없음’의 많은 수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누리당 보다는 민주통합당 지지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민주통합당의 선거에서의 승리는 이들 층을 어느 정도 자신의 정당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바꾸어 놓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었다고도 보여진다.

대선 후보 3인의 지지도 조사 결과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3인 모두 본격적인 대선 후보에 나서기 이전이어서 선거 시점의 지지율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야권 후보 선출 이후 상승된 지지율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지지성향은 조사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성향은 정당 지지도와 유사하다. 즉, 새누리당 지지층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여, 여성, 높은 연령층, 영남권, 보수적 정치 성향, 불교 신자에게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정당 지지율과 비교해서는 강원/제주에 있어 평균보다 높게, 개신교 신자에게서 낮게 나타는 것이 특징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상 양자대결의 경우 이러한 차이가 모두 사라진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남성, 젊은 연령층, 진보적 정치 성향, 가톨릭인/무종교인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 비해 남성, 호남, 가톨릭인에게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호남의 낮은 지지율은 민주통합당 경선 과정에서 대두된 노무현 정부 시절의 ‘호남 홀대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 신자의 낮은 지지율은 설명이 쉽지 않고, 사례 수도 많지 않아 표본오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다른 조사에 의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 후보에 대한 종교적 변수의 효과를 요약하면, 정당 지지도와 마찬가지로 불교는 박근혜, 무종교층에서는 야권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며, 정당 지지율에 비해 박근혜 후보는 개신교 신자에게서, 문재인 후보는 가톨릭 신자에게서 지지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표 3. 대선후보 지지도(2012 헤럴드 경제 조사 자료)

구 분		사례수	문재인		박근혜		안철수	
			빈도	%	빈도	%	빈도	%
		(1,000)	118	11.8	383	38.3	252	25.2
성별	남성	(500)	58	11.6	166	33.2	150	30.0
	여성	(500)	60	12.0	217	43.4	102	20.4
연령별	20대	(184)	33	17.9	52	28.3	68	37.0
	30대	(205)	39	19.0	45	22.0	72	35.1
	40대	(220)	20	9.1	85	38.6	60	27.3
	50대	(187)	13	7.0	80	42.8	29	15.5
	60대 이상	(204)	13	6.4	121	59.3	23	11.3
권역별	서울	(202)	30	14.9	76	37.6	50	24.8
	경기/인천	(289)	39	13.5	92	31.8	84	29.1
	영남권	(262)	22	8.4	142	54.2	46	17.6
	호남권	(103)	12	11.7	12	11.7	43	41.7
	충청권	(102)	12	11.8	41	40.2	20	19.6
	강원/제주	(42)	3	7.1	20	47.6	9	21.4
성향별	진보적	(366)	74	20.2	78	21.3	144	39.3
	중도적	(329)	33	10.0	117	35.6	76	23.1
	보수적	(305)	11	3.6	188	61.6	32	10.5
종교별	가톨릭	(86)	6	7.0	34	39.5	24	27.9
	개신교	(251)	28	11.2	95	37.8	61	24.3
	불교	(211)	21	10.0	115	54.5	39	18.5
	없음	(432)	59	13.7	132	30.6	123	28.5

표 4에 나타난 양자대결 박근혜 vs. 문재인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정당, 혹은 단순 후보 지지도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대로 박근혜 후보의 상대적으로 높은 강원/제주 지지도와 상대적으로 낮은 개신교인의 지지도 효과가 모두 사라진다. 강원/제주 지지도의 경우는 단순 후보 지지도와 양자 대결 지지도가 정확하게 일치하나, 양자 대결 시의 평균 지지도가 상승한 결과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개신교인의 경우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새누리당 지지층이 양자대결의 경우 결국은 박근혜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문재인 후보의 (단순 후보 지지도와 비교할 때의) 남성, 호남에서의 지지율 상승도 전통적인 민주통합당 지지층인 이들이 양자 대결의 경우 결국 야권 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가톨릭에서의 문재인 후보의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은 양자 대결 구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지지후보 모름/없음’의 경우 연령적으로 정당 지지도와는 달리 40대 이상에

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40대 이상의 ‘지지후보 모름/없음’이 늘어났다기 보다는, 민주 통합당에 대한 정당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젊은 층이 양자대결 구도에 있어서는 결국 야권 후보를 지지한 결과로 보여 진다.

표 4. 가상대결: 박근혜 vs. 문재인(2012 헤럴드 경제 조사 자료)

구 분		사례수 (1,000)	박근혜		문재인		없음/모름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성	(500)	255	51.0	182
	여성	(500)	303	60.6	141	28.2	56	11.2
연령별	20대	(184)	88	47.8	75	40.8	21	11.4
	30대	(205)	82	40.0	112	54.6	11	5.4
	40대	(220)	120	54.5	67	30.5	33	15.0
	50대	(187)	120	64.2	38	20.3	29	15.5
	60대 이상	(204)	148	72.5	31	15.2	25	12.3
권역별	서울	(202)	114	56.4	65	32.2	23	11.4
	경기/인천	(289)	165	57.1	91	31.5	33	11.4
	영남권	(262)	186	71.0	60	22.9	16	6.1
	호남권	(103)	19	18.4	64	62.1	20	19.4
	충청권	(102)	54	52.9	32	31.4	16	15.7
	강원/제주	(42)	20	47.6	11	26.2	11	26.2
성향별	진보적	(366)	136	37.2	199	54.4	31	8.5
	중도적	(329)	176	53.5	95	28.9	58	17.6
	보수적	(305)	246	80.7	29	9.5	30	9.8
종교별	가톨릭	(86)	48	55.8	23	26.7	15	17.4
	개신교	(251)	141	56.2	81	32.3	29	11.6
	불교	(211)	144	68.2	48	22.7	19	9.0
	없음	(432)	213	49.3	165	38.2	54	12.5

표 5에 나타난 박근혜 vs. 안철수의 양자대결의 경우에는 민주통합당 후보 확정 이후 문재인 후보의 전반적인 지지율 상승을 고려할 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순 지지도 차이보다는 어느 층에서 지지도의 차이가 많고, 적은가를 따지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권역별로는 먼저 전체적으로는 ‘없음/모름’의 비율이 약간씩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남권에서 ‘없음/모름’의 비율이 조금 늘었다(+3.1%)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영남권에서의 박근혜 vs. 안철수 후보 양자의 지지도 변화와 함께 고려해 봤을 때, 이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보다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더 경쟁력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결과이다. 또한 강원/제주의 ‘없음/모름’의 비율이 대폭 줄고(-16.7%), 이러한 지지세가 안철

수 후보의 지지율 증가로 이어졌다(+16.7%)는 것도 눈에 띈다. 물론 이는 민주당 통합당 후보 확정 이후 문재인 후보의 전반적인 지지율 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양자대결에 있어 결국은 야권 후보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인 호남과는 달리, 이들 지역에서는 야권에서 어느 후보를 내는가가 결과에 어느 정도 차이를 나타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치적 성향과 관련하여서는 안철수 후보로 가상 대결을 할 경우 문재인 후보의 경우보다 중도적 입장에서(+13.3%) 평균(+9.0%)보다 높게 증가하였고, 종교별로는 가톨릭(+15.2%)과 무종교층(+13.9)에서 가장 높게 증가하였다. 가톨릭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문재인 후보의 가톨릭 신자에 있어서의 낮은 증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개신교(+4.4)와 불교(+3.4) 신자의 경우 증가율은 평균에 못 미치며, 이는 일반적인 박근혜 후보 지지층의 낮은 증가율의 반영으로 보인다.

표 5. 가상대결: 박근혜 vs. 안철수(2012 헤럴드 경제 조사 자료)

구 분		사례수 (1,000)	박근혜		안철수		없음/모름	
			빈도	%	빈도	%	빈도	%
					479	47.9	413	41.3
성별	남성	(500)	216	43.2	234	46.8	50	10.0
	여성	(500)	263	52.6	179	35.8	58	11.6
연령별	20대	(184)	67	36.4	98	53.3	19	10.3
	30대	(205)	60	29.3	132	64.4	13	6.3
	40대	(220)	105	47.7	92	41.8	23	10.5
	50대	(187)	105	56.1	54	28.9	28	15.0
	60대 이상	(204)	142	69.6	37	18.1	25	12.3
권역별	서울	(202)	94	46.5	84	41.6	24	11.9
	경기/인천	(289)	137	47.4	125	43.3	27	9.3
	영남권	(262)	166	63.4	72	27.5	24	9.2
	호남권	(103)	13	12.6	76	73.8	14	13.6
	충청권 강원/제주	(102) (42)	49 20	48.0 47.6	38 18	37.3 42.9	15 4	14.7 9.5
성향별	진보적	(366)	110	30.1	230	62.8	26	7.1
	중도적	(329)	132	40.1	139	42.2	58	17.6
	보수적	(305)	237	77.7	44	14.4	24	7.9
종교별	가톨릭	(86)	38	44.2	36	41.9	12	14.0
	개신교	(251)	139	55.4	92	36.7	20	8.0
	불교	(211)	133	63.0	55	26.1	23	10.9
	없음	(432)	158	36.6	225	52.1	49	11.3

이상의 결과를 종교적 변수와 관련하여 정리하여 보면 불교에 있어서는 박근혜 후보/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높고, 개신교는 평균에 근접한 지지 양상을 보이거나, 혹은 약간 박근혜 후보/새누리당에 보다 가까운 경향을 보이며, 가톨릭과 무종교층은 야권 후보/민주통합당의 지지 양상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가톨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이거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조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헤럴드 경제의 정당/대선 후보자 지지를 기초로 한국의 종교와 정치성향 간의 관계를 추론해 본다면, 불교-보수, 개신교-중도 보수, 가톨릭/무종교층-진보로 요약 가능하다.

그렇다면 종교적 변수는 선거에 있어 의미 있는 변수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까? 이미 언급한 바처럼 종교적 변수는 여타 변수, 특히 연령이나 지역의 변수와 결합되어 있고, 이를 구분하기 이전에는 종교적 변수가 유의미하게 작용한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까지 인용한 헤럴드 경제의 조사 결과에서는 이를 분리해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KGSS 자료를 통하여 이를 보완하였다. 물론 KGSS 조사는 대선 국면에 대한 조사가 아니기에, 대선 후보 각자의 지지도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한국의 정당들이 지속적으로 해체-분당-재창당 등의 과정을 거쳐 왔기에 특정 정당의 지지도 확인도 쉽지는 않다. 그래서 본 분석은 1차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주요 종속 변수로 하였고, 2차적으로 정당 지지도를 분석하였다. 정당 지지도 분석에 있어서는, 기존의 한나라당, 국민중심당, 친박연대, 자유선진당을 하나로 리코딩(recoding)하였고, 새천년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통합당을 다른 하나로 리코딩(recoding)하였다. 또한 정치적 성향에 대한 분석은 다중 회귀 분석 방법을 통해, 정당 지지도 분석은 다중 로짓 분석 방법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처리되었다.¹²⁾ 그리고, 양자의 분석 모두에서 종교와 성(model 1), 연령(model 2), 교육년수(model 3), 지역(model 4)의 순으로 변인을 포함시켰다. 중요 변수 중 가계 소득은 무응답자가 많아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에도,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먼저 KGSS 조사에 따른 정치적 성향 분석 결과는 표 6에 요약되어 있다.

표 6에 나타난 KGSS 자료의 분석 결과는 대체로 헤럴드 경제의 분석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영남 지역에서 보수적인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종교 변수와 관련하여서도 헤럴드 경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불교가 가장 보수적인 쪽에 위치했으며, 개신교가 중간, 가톨릭이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무종교층은, 가톨

12) KGSS 조사 결과의 통계적 분석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누적자료를 사용하였고, 경희대학교 박사과정의 정상근 선생이 수고해 주었다.

릭과 함께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내었던 헤럴드 경제 결과와 달리, 개신교와 비슷한 중도적 입장을 나타내었다. 무종교층의 정치적 성향에 대하여는 뒤의 정당 지지도를 종속 변수로 한 분석에서 다시 한 번 언급하고자 한다.

표 6. 종교와 정치성향 분석(KGSS 조사 자료)

변수	model1	model2	model3	model4
종속: 정치성향				
종교(불교 기준)				
개신교	-0.196***	-0.166***	-0.166***	-0.146***
가톨릭	-0.261***	-0.241***	-0.239***	-0.225***
기타	-0.018	-0.049	-0.046	-0.026
종교 없음	-0.180***	-0.134***	-0.133***	-0.118***
성(남성 기준)				
여성	0.074**	0.080***	0.080***	0.080***
연령				
교육년수		0.008***	0.008***	0.008***
지역(서울 기준)				
경기도				0.059*
강원도				0.079
충북				0.06
충남				0.093
전북				-0.085
전남				-0.033
경북				0.100**
경남				0.086**
제주도				-0.143
상수				
	3.162***	2.800***	2.804***	2.737***
N				
	9826	9816	9761	9761
r2				
	0.01	0.025	0.025	0.028
r2_a				
	0.01	0.025	0.024	0.026

* < p=.05; ** < p=.01; *** < p=.001.

종속변수: 매우 진보(1) - 매우 보수(5)로 코딩.

KGSS 자료가 헤럴드 경제 자료에 대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점은 연령과 지역이라는 통제 변수가 추가되었을 때에도 종교가 여전히 의미 있는 변수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령은 모델 2에, 지역은 모델 4에서 각각 투입되었는데, 연령을 통제 변수로 추가한 모델 2의 경우는 조정된 결정계수(R^2)가 0.01에서 0.025로 증가하여 정치적 성향과 관련하여 상당히 의미 있는 통제 변수로 작용함을 보여 주었다. 반면, 지역을 통제 변수로 추가한 모델 4의 경우는 영남 지역과 경기 지역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정계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뒤에서 논의할 정당 지지도 분석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경기가 강원이나 충청 지역에 비하여 낮은 상관계수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표본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위의 모델에서 현재의 주제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교적 요인이 연령과 지역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종교와 성의 변수가 함께 투입된 모델 1의 결정계수는 0.01로 이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적다. 하지만, 적은 차이일지라도 그것이 연령과 지역에 독립적으로 계속해서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성향이 아닌 정당 지지도를 종속 변수로 한 분석 결과는 표 7에 나타나 있다. 이 경우에는 종속 변수가 명목 변수인 관계로 회귀 분석이 아닌,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지만, 통제 변수의 투입 순서는 앞의 표 6과 같다. 모델 1에서 4까지는 새누리당을 기준으로 민주통합당의 지지도를 분석하였으며, 모델 5에는 별도로 진보진영 정당의 지지도를 역시 새누리당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에도 종교는 여전히 유의미한 변수로서의 영향을 유지하였고, 이는 연령과 지역을 통제 변수로 추가한 경우에도 유지되었다. 다만, 가톨릭의 경우 개신교나 무종교층에 비해 민주당지지 성향이 약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인데, 이는 부분적으로 진보 진영을 지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모델 5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가톨릭의 보다 진보적 정치 성향과도 일치한다. 무종교층의 경우 모델 1에서 4까지만을 보았을 때는, 앞의 정치적 성향을 종속 변수로 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개신교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나, 진보 진영을 종속 변수로 한 모델 5에서는 가장 강한 지지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앞서 헤럴드 경제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이는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갖는 무종교층이 강력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보수에서 진보까지 상대적으로 고르게 퍼져 있어, 정치적 성향 면에서는 중도에 가까운 성향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 종교와 정당 지지도 분석(KGSS 조사 자료)

변수	model1	model2	model3	model4	model 5
종속: 민주당 지지(새누리당 기준)					진보진영지지
종교(불교 기준)					
개신교	0.698***	0.642***	0.700***	0.339***	0.111
가톨릭	0.409***	0.379***	0.468***	0.228	0.366*
기타	0.653*	0.709*	0.728*	0.538	-0.708
종교없음	0.683***	0.599***	0.621***	0.353***	0.466***
성(남성 기준)					
여성	0.026	0.031	-0.044	-0.022	-0.247**
연령					
		-0.017***	-0.025***	-0.034***	-0.059***
교육년수					
			-0.049***	-0.046***	0.007
지역(서울 기준)					
경기, 인천				-0.189*	-0.01
강원				-0.432*	-0.635*
충북				-0.277	-0.088
충남				0.087	-0.117
전북				2.660***	1.972***
전남				3.096***	2.675***
경북				-1.298***	-0.600***
경남				-0.836***	-0.293*
제주				0.386	0.367
상수					
	-1.028***	-0.212	0.732***	1.335***	1.050***
N					
	6340	6335	6293		6293
pseudo r2					
	0.0145	0.0459	0.0481		0.1291
chi2					
	197.48	623.36	649.9		1742.72
loglikelihood					
	-6700.04	-6482.75	-6425.47		-5879.06

* < p=.05; ** < p=.01; *** < p=.001

정당 지지도를 종속 변수로 하였을 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는 지역 변수가 갖는 의미이다. 이는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 지역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로그 우도(likelihood)나 유사 결정계수(pseudo R^2)로 측정된 모델의 적합성이 높아진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정당 지지도를 종속 변수로 하였을 때, 지역 변수의 투입이 가져오는 모델 적합성의 변화는 연령 변수보다도 오히려 더 컸다. 구체적으로는 경기가 제외되고, 강원과 호남 지역이 추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을 기준으로 강원은 새누리당 지지도가, 호남에서는 민주당 및 진보 진영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기 지역의 경우 정치적 성향은 서울에 비해 약간 보수적으로 나타났지만, 정당지지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헤럴드 경제와 KGSS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종교적 요인은 정치적 성향 및 정당 지지도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물론 종교로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지만, 이는 연령과 지역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별 정치 성향/정당 지지도를 위의 두 결과를 통해 지형화(mapping)해 본다면 현재로서는 불교-보수/새누리당, 개신교-중도 보수/약간 새누리당 쪽으로 치우친 중도, 가톨릭-진보/민주당 혹은 진보 정당 지지로 볼 수 있으며, 무종교층은 위의 종교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하지만, 진보 성향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결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종교에 따른 정치적 지형화는 평균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각 종교에 있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이러한 평균적 경향 아래 다양하게 위치할 것이다.

Ⅲ. 선거 쟁점으로서의 종교 관련 이슈들

이제 이러한 각 종교별 정치적 성향을 바탕으로 대선과정에서 대두되었던, 그리고 현재도 유효한 종교 편향 혹은 전반적인 종교와 관련된 이슈들이 얼마나 선거의 쟁점으로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선거를 앞두고 불교 및 개신교를 중심으로 각 종파와 관련된 현안들을 선거와 연결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난 바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불교계의 소위 ‘종교평화법’의 추진이며, 이에 대해 보수적 개신교에서는 ‘기독교 공공정책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공무원의 종교활동 자유’, ‘종교를 고려한 중고등학교의 자율 선택’ 등 나름 대로의 현안을 추진하였다.

종교문제와 관련된 불교와 보수적 개신교 간의 대립은 이미 이명박 정부 하에

서의 ‘공무원 종교 차별 금지’의 조항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나타난 바 있다. ‘종교 차별 금지’가 별도의 규정으로 명문화된 것은 2008년 불교계가 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예배드리는 문제, ② 국토부, 교육부의 교통 정보 시스템에 중요 사찰의 지명이 누락 된 건, ③ 어청수 당시 경찰청장의 민족 복음화 발언 및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트렁크 검문의 건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통령의 사과 및 어청수 청장의 사퇴와 종교차별 금지법의 제정을 요구하면서 이슈화되었다. 이러한 불교계의 요구에 대해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종교편향 논란과 관련하여 법·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공무원의 종교차별 행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감시·감독”할 것을 얘기하였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는 최종적으로 2009년 2월 6일에 공무원의 종교중립의 의무가 국가공무원법 59조의 2로 삽입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¹³⁾ 하지만 보수적 개신교측에서는 이 조항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여 왔다.¹⁴⁾

‘공무원 종교 차별’을 둘러싼 불교와 보수적 개신교의 대립은 현재 ‘종교평화법’과 소위 ‘종자연’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¹⁵⁾ ‘종교평화법’은 2011년 1월 조계종 화쟁위원회에 의해 ‘열린 신앙관’과 타종교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통한 종교적 갈등의 해결을 기치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화쟁위는 불교계 자체의 종교평화 선언과 함께, 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치권에도 평화선언의 정신에 맞는 ‘종교평화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전면에 내세운 ‘종교 평화’의 이면에는 “개신교의 공격적 선교행위”를 막고, “상대 종교를 교리적으로 비방하거나 성물을 손괴하거나 신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묻자”는 목적을 담고 있어서 개신교 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¹⁶⁾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현재 법 체계에서도 차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교차별을 이유로) 가중차별하는 것은 모순”이며, “만약 정치권에서 (입법)한다면 몰라도

13) 「국가공무원법」 제 59조의 2 “(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14) 최현중, “종교와 법률 제도: 공직자 종교차별 관련법을 중심으로,” 박창훈 엮음, 『한국 정치와 기독교 공공정책』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2) 참조.

15) 소위 ‘종자연’ 사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을 받아 학교내 종교차별 사태를 조사하던 ‘종교자유정책연구원(약칭 종자연)’ 불교계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자, 개신교 측이 특정 종교의 지원을 받은 단체가 종교차별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고 항의하면서 불거졌다.

16) 2011.12.3. 「불교신문」 칼럼.

정교분리원칙에도 위배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법 계획은 없다”며 법 제정 계획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¹⁷⁾ 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종교평화법’ 제정 문제는 이후 대선 국면을 맞이하면서 다시 종교계를 중심으로 선거의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에 대해 보수적 개신교 측은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대선 국면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이슈화했다. 특히 선거를 바로 앞둔 시점에는 “공정한 종교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작업”이라는 취지 하에 19대 국회의원들의 공공정책 및 종교에 관한 의견 및 인식을 조사한 바 있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공무원의 종교 활동 자유에 대한 인식’, ‘종교차별 실태조사의 불교 관련 기관 진행에 대한 인식’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8은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실시한 종교관련 이슈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8. 종교이슈 관련 주요 조사 결과(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국회의원 인식조사)

문항	응답내용	비율(%)
공무원의 종교 활동 자유에 대한 인식	종교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	2.3
	종교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80.9
	모름/무응답	16.8
종교를 고려한 진학 중고등학교 자율 선택에 대한 찬반	찬성한다	57.9
	반대한다	22.3
	모름/무응답	19.8
각종 국가고시 및 공공자격시험의 시행일에 대한 인식	토요일에 실시하여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43.8
	기존처럼 일요일에 시행해야 한다	33.4
	모름/무응답	22.8
종교차별 실태조사의 불교 관련 기관 진행에 대한 인식	문제가 있다	43.6
	문제가 없다	26.6
	모름/무응답	29.8
이슬람채권법 도입에 대한 인식	문제점이 나타난 만큼 특혜를 주는 것에 반대한다	42.5
	특혜를 주더라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찬성한다	22.1
	모름/무응답	35.4
국장 중 종교 의식의 바람직한 진행 방식	기존과 같이 4대 종교가 모두 참여하여 진행하는 방식 유지	49.4
	본인 유언, 가족 선택에 의한 1개의 종교 의식으로만 진행	10.6
	국장 중 국가 예식은 유지하되, 종교 의식은 폐지	17.6

17) <http://www.btnnews.tv/news/view.asp?idx=18520&msection=4&ssection=14>, 2012.10.30 검색.

	모름/무응답	22.4
한국 기독교의 역사 발전 기여도에 대한 인식	크게 기여하였다	73.8
	기여하지 않았다	6.8
	모름/무응답	19.4
정부 차원에서의 기독교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찬반	찬성한다	56.7
	반대한다	22.5
	모름/무응답	20.9
기독교의 근현대 한국사회 영향에 대한 타 종교와 균형적 교과서 서술 주장 공감 여부	공감한다	63.6
	공감하지 않는다	14.6
	모름/무응답	21.8
근대 기독교 문화 유적지의 문화재 지정 보호에 대한 찬반	찬성한다	63.7
	반대한다	11.3
	모름/무응답	25.0
한국 기독교의 한국사회 기여도에 대한 인식	크게 기여하고 있다	70.8
	기여하고 있지 않다	9.8
	모름/무응답	19.4
한국 기독교 해외선교활동의 한국 이미지 제고 도움 여부	도움이 된다	53.4
	도움이 되지 않는다	24.6
	모름/무응답	22.0
우리 사회가 우대하고 있는 특정 종교	기독교	39.3
	불교	3.1
	천주교	0.6
	기타	0.6
	특별히 우대하고 있는 종교는 없다	37.0
	모름/무응답	19.3
종립학교의 종교 교과 및 선발 기준의 자율성 보유에 대한 찬반	찬성한다	33.7
	반대한다	44.7
	모름/무응답	21.5
타 종교 대비 불교에 보다 많은 예산 지원이 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인식	종교 간 형평성을 위해 균형적으로 맞추는 것이 옳다	29.5
	문화재 보호 등 타 분야와 연결된 문제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	44.1
	모름/무응답	26.3
종교계 예산 관련 외부 기관 필요 주장에	공감한다	34.7
	공감하지 않는다	42.1

대한 공감 여부	모름/무응답	23.2
종교시설의 부동산실 명제 위반 논란에 대 한 인식	실명제 위반이 아니다	26.5
	실명제 위반이다	32.0
	모름/무응답	41.5
낙태에 대한 찬반	찬성한다	14.5
	반대한다	75.1
	모름/무응답	10.5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	찬성한다	22.3
	반대한다	64.1
	모름/무응답	13.6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청소년 유해 방송, 인 터넷 사이트 규제에 대한 인식	잘 규제하고 있다	10.7
	잘 규제하고 있지 못하다	81.4
	모름/무응답	7.9
북한 인권 관련법 통 과에 대한 찬반	찬성한다	62.4
	반대한다	24.9
	모름/무응답	12.7

* 출처: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2012), “한국기독교공공정책 관련 국회의원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

그렇다면 이와 같은 종교 관련 이슈들은 선거 국면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먼저 이러한 이슈들을 일반 국민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국민은 종교인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보인다. 최현중에 따르면 종파에 상관없이 종교의 정치 참여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정치색을 띠는 활동은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이 많았다.¹⁸⁾ 또한 사회의 여러 제도적 영역 중 정치를 가장 종교와 구분되어야 할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¹⁹⁾ 하지만, 해당 이슈를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는 경우에는 다르다. 사회적 문제의 경우는 종교적으로 책임을 갖고 언급할 과제로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70-80년대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종교 기관이 감당해야 했던 것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특정 정치의 영역이기보다는 사회적 문제의 영역으로 생각되어

18) 최현중, 2011, pp. 56-62.

19) Hyun-Jong Choi, *Religiosität und moralische Verbindlichkeit in Südkorea*, (Dissertation: Leipzig Universität, 2009), pp. 183-87.

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종교적 이슈를 정치의 특수한 영역으로 보느냐, 전체 사회의 문제로 보느냐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점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각 종교 단체가 추구하는 정책이 얼마나 국민적 공감을 얻어 선거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구분은 카사노바가 정치와 종교 간의 관계를 정치적 영역에서 다룰 것인가, 혹은 시민 사회의 영역에서 다룰 것인가를 구분한 것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기능적으로 분화된 현대 사회에서 정치와 종교의 문제가 시민 사회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큰 거부감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이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국민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치의 고유한 영역과 전체 사회적 문제의 영역 간의 경계는 매우 모호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론적으로 명확한 경계보다는 현실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문제가 중요하고, 이러한 경계는 명확하지는 않아도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직까지는 종교계가 제기한 이슈들이 국민적 공감을 많이 얻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문제는 사회적 문제의 영역 보다는, 정치적 영역의 문제로 취급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 관련 이슈의 정책화를 추진하는 종교 단체들은 일종의 이익집단처럼 비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슈의 성격을 넘어 현대 사회에 있어 종교가 부여하는 연대감이나 가치와 관련된다. 알렉산더(J. Alexander)는 정치는 연대감과 가치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한바 있는데,²⁰⁾ 이와 관련하여 종교가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일관된 정치적인 연대감과 가치를 생산해 내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연령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종교가 같다는 이유로 어느 정도 동일한 정치적 지향성을 나타낼까? 물론 앞서의 헤럴드 경제의 조사 결과와 KGSS 분석 결과는 종교적 요인이 정치적 지향성이나, 정당 및 대통령 후보 지지에 있어 독립적인 변수로 어느 정도는 작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가 강력하지는 않았다. 또한 그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위에서 제기된 종교관련 이슈들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종교 기관 내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인데, 이 또한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인다. 즉, 각 종교 단체가 제기하는 주요 종교관련 이슈들의 상당수는 종교 기관 내에서도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쟁점들이 많고, 특히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신도들 간의 괴리는 적

20) Jeffrey C. Alexander, 『현대 사회이론의 흐름: 사회학도를 위한 스무개의 강의록』 이윤희 옮김, (서울: 민영사, 1993), pp. 113-21

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종교 내에서조차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선거에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 가지 더 언급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러한 종교 관련 이슈들이 정당 및 후보자 지지에서 갖는 상대적 중요성의 문제이다. 즉, 일반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이러한 정책에 대한 추진 여부에 따라 과연 지지 정당/후보자 지지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종교관계자조차도 위의 이슈들에 따라 자신의 지지정당/후보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특정 정당/후보에 대한 지지, 또한 정치적 지향성은 어느 하나의 정책, 특히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크지 않은 정책들에 의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종교 관련 이슈들이 대선 정국에서 대두된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를 51:49의 박빙 대결의 국면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즉, 1%의 지지가 아쉬운 상황에서 특정 집단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종교 지도층의 지지 확보가 곧 일반 신도들의 지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종교적 연대감에 대한, 또한 이러한 정책들이 갖는 선거에 있어서의 태도 변화 효과에 대한 확대 해석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이러한 종교 관련 이슈들은 이슈들의 정책화를 추진하는 집단뿐 아니라, 이에 대한 안티 세력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로 얻을 수 있는 지지 세력은 이를 반대하는 세력을 잃음으로 상쇄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 관련 이슈들이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혹은 후보자들의 이목을 끌고, 정책화의 과정을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선거에 중요한 변수로 - 종교가 어느 정도 독립 변수로 작용한다 할지라도 - 작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V. 나가는 말

본 논문은 ‘현대의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에서도 여전히 종교는 선거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선거, 특히 지난 대선 상황과 관련하여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대선 정국을 앞두고 행해진 조사 중 종교적 요인을 변수로 한 헤럴드 경제의 조사 결과와 KGSS의 기존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고, 이어서 종교 관련 이슈들이 선거 국면에서 갖는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헤럴드 경제 조사 결과는 조사 시점이 지난 5월이었고, 이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후보가 확정되고,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가 확정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실제의 대선 시점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인구사회학적 지표에 따른 기본적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 분석되었다. 그 결과 본 논문의 초점인 종교적 변수와 관련하여, 불교는 박근혜 후보/새누리당, 개신교는 평균에 근접한 지지 양상 혹은 약간 박근혜 후보/새누리당에 가까운, 그리고 가톨릭과 무종교층은 야권 후보/민주통합당의 지지 양상을 나타내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가톨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인 것이 특징적이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표본 수가 많지 않아 별도의 조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헤럴드 경제의 조사의 분석 결과는 불교-보수, 개신교-중도 보수, 가톨릭/무종교층-진보로 요약 가능하다. 그러나 종교적 변수는 다른 변수, 특히 연령이나 지역의 변수와 결합되어 있고, 이를 구분하기 이전에는 종교적 변수가 유의미하게 작용한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KGSS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였다. 이에 따르면 종교적 요인은 그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연령이나 지역 변수와 독립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작용하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종교적 요인이 현재의 대선 국면에서 어느 정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 본 논문은 종교가 기본적인 정치적 성향과 상관을 보이지만, 현재의 종교 관련 이슈들이 현재의 상관성을 바꾸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먼저, 우리 국민들은 종교인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또한 현재의 종교 관련 이슈들은 문제를 제기한 종교 내에서도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의 정치적 지향성을 바꿀 만한 상대적 중요성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본 논문을 마치면서 필자는 맨 처음에 제기하였던 종교가 현대 사회에서 정치와 관련되는 방법에 대한 카사노바의 논의로 돌아가고자 한다. 국교, 정치 영역, 시민 사회 영역의 3가지 수준 중 기능적으로 분화된 현대 사회에 가장 적합한 상호작용의 수준을 시민사회로 바라본 카사노바의 입장은 정치와 종교의 결합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가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대처해 줄 것을 바라는 어찌면 모순된 연구 결과에 상응한다.²¹⁾ 즉, 종교가 어느 정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냐의 관건은, 그들이 제기한 이슈들이 어느 정도 시민사회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여진다. 즉 특정 종교 집단이 제기한 문제들이 정치권의 이해와 맞물려 단기

21) Choi, 앞의 책, pp. 183-87.

간에 정책화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시민 사회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정책을 추진한 종교 집단은 일종의 이익집단으로 비춰지고, 나아가 시민 사회의 부정적 시각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한 가지 더 논문을 마치면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종파 혹은 교단 간의 정치적 지향성에 따른 연합 가능성이다. 미국의 경우 이미 교단이라는 이름보다는, 이러한 보수-진보의 지향성을 따라 종교와 정치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보수적 기독교는 진보적 기독교 신자인 오바마(B. Obama)보다는 물론교 신자인 롬니(M. Romney)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가톨릭 신자인 샌토럼(R. Santorum)이 후보로 선출되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물론 불교-개신교, 혹은 불교-가톨릭이 정치적 지향성에 따라 결합하는 것은 개신교-가톨릭 혹은 개신교-물론간의 관계보다는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개신교-가톨릭 뿐 아니라, 개신교-불교, 가톨릭-불교 간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종교 인구의 변동 상황이나, 불교를 개신교보다 더 유사한 종교로 평가하는 가톨릭 신자들의 경우를 볼 때,²²⁾ 이러한 결합이 꼭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주제어: 정치와 종교, 선거, 정치적 지향성, 공적 영역, 사회변동

원고접수일: 2013년 4월 16일

심사완료일: 2013년 6월 1일

게재확정일: 2013년 6월 10일

22) 최현중, 2011, pp. 48-49.

참고 문헌

-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 General Social Survey). 2003-2009 누적자료. 헤럴드 경제. “재창간 9주년 기념 대선여론조사 자료.” 2012.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인구센서스 자료.
-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한국기독교공공정책 관련 국회의원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 2012.
- 유석춘/서원석. “유동표에 대한 관별분석: ‘87년 대통령선거.” 『한국사회학』 23. 1989.
- 이원규. 『종교사회학의 이해』 개정판. 파주: 나남, 2006.
- 최현중. 『한국 종교인구변동에 관한 연구』. 부천: 서울신학대학교출판부, 2011.
- . “종교와 법률 제도: 공직자 종교차별 관련법을 중심으로.” 박창훈 엮음. 『한국 정치와 기독교 공공정책』.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2.
- 한신대학교 학술원 신학연구소. 『한국 기독교인의 정치·사회 의식 조사』. 파주: 한울, 2004.
- Alexander, Jeffrey C. 『현대 사회이론의 흐름: 사회학도를 위한 스무개의 강의록』. 이윤희 옮김. 서울: 민영사, 1993.
- Casanova, Jose. *Public religions in the modern wor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 Choi, Hyun-Jong. *Religiosität und moralische Verbindlichkeit in Südkorea*. Dissertation: Leipzig Universität, 2009.
- Manza, Jeff and Nathan Wright. “Religion and Political Behavior,” in: Michele Dilloned.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Relig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Martin, David. *Tongues of fire: the explosion of Protestantism in Latin America*. Oxford: Blackwell Publishers, 1990.
- 「불교신문」 칼럼. 2011.12.3.
<http://www.btnnews.tv/news/view.asp?idx=18520&msection=4&ssection=14>
(2012.10.30 검색).

<Abstract>

Religious Factors as an Independent Variable in Elections

Hyun Jong Choi (Institute for the Study of Christian Theology)

In this paper, I tried to answer the question, “Do religious factors still serve as an important variable in the elections of Korea?” This is an attemp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politics in a functionally differentiated modern society. The situation in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was analyzed especially through the Herald Economics survey and then complemented by the KGSS(Korean General Social Survey). As a result, religious factors worked as a significant variable independent of age or district, though the effect was not strong. In general, Buddhists have a conservative, Protestants a conservative-centrist, Catholics and Non-religious a liberal political tendency.

In addition, I considered the connotations that the religious issues have in the election. As a result, I regarded those factors as not significantly changing the current electoral circumstances, because 1) people view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religious as negative, 2) those issues were not enough to go through a consensus process even within the confession, 3) they do not have a sufficient importance to change the current political tendency.

Finally, I agreed with J. Casanova’s thesis that the most appropriate among the three interaction levels between religion and politics(state, political society and civil society) is civil society. How strongly the religious issues will influence politics depends upon how strong an empathy is raised within civil society. In conclusion, the possibility of coalitions between the various confessions according to their political

tendency was therewith suggested.

Key Words: Politics and Religion, Election, Political Tendency, Public Sphere, Social Change

K C I